

'광장 정치' 업은 2월 임시국회, 시계 제로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 난방비·공공요금 등 공방 예고 '김건희 특검·이재명 수사' 격돌 양곡관리법 등 현안 산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해 장외 투쟁에 나선 가운데, 2월 임시국회에서도 주요 현안마다 여야간 격돌이 예고돼 '빈손 국회'가 우려된다.

여야는 6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윤 정부 들어 두 번째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7일은 경제 분야, 8일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나온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을 대북송금 연루 의혹, 북한 무인기 침범 등 안보 문제를 두고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제분야 현안은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크게 동요한 가운데 전기, 공공요금 줄인상 등 민생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난방비 인상 원인을 두고 또다시 책임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최근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화 조사 등 노동 관련 이

슈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에선 이 대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를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열었다고 공격해온 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의 '광장 정치'에 대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주말 광장정치로 고조된 대정부 투쟁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회 '밤생방송'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6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어서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양측의 정쟁 국면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생 입법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달 임시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 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난방비 폭탄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달 국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

성을 내비치면서 여야 갈등은 한층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3·8 정당대회 모드로 돌입한 국민의힘도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알 수 없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면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의석 수로 부결시킬 수는 있지만, '방탄 국회' 논란 등 여야간 격렬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오는 13일과 14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린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양향자, 지역 대학서 '과학기술패권국가' 릴레이 강연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사진)이 지역대학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주제로 릴레이 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고있다.

양 의원은 지난 3일 호남대에서 '과학기술 패권국가-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강연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래 첨단산업도시 광주'의 비전 실현을 위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로서 반도체는 물론 산업계의 현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하는 가교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서 전남대, GIST, 동신대 강연을 통



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지역의 융합형 인재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 한편 광주전남 본부와 광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도 강연하며 지역 중심 릴레이 강연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의 운명은 첨단 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 승리해야 개척될 수 있다"며 "K-반도체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오는 3월14일 광주 인재육성아카데미, 17일 조선대학교 강연이 예정돼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양정숙 '비실명거래 사전 차단' 대표통장 방지법 발의

양정숙(사진) 무소속 의원은 5일 대표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에 △비실명거래 의심자에 대한 거래 거절 설명의무 △비실명거래 의심 건에 대한 조사 의무 △비실명거래가 확인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장에게 보고의무를 각 부과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비실명거래로 보고된 건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 등에 보고 받은 내용의 전파 의무를 규정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함께 국민이 대표통장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재혁 '지역정당 설립'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 제안

"지방선거에 '여의도 입김' 차단"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의도 중심의 중앙정치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혁(사진)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은 5일 "새해 들어 정치 개혁은 유권자들의 피할 수 없는 요구가 됐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당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당법엔 정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고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등록하게 돼 있다. 지역당의 법적 존재 근거가 없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소장은 "여의도 정치인의 입김이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에서



오래 활동해온 지방일꾼들이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탓이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정당공천을 받고 당선된 지방 권력은 다음 총선에서 여의도 정치인을 중심으로 줄서기 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중앙당, 지역당 '2층 구조'로 국가정책, 외교, 국방 등의 거시적 사안을 다루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중앙당에, 지방의회, 지방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이는 지역정당에 가입하도록 피선거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입기가 남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공천을 금지해 중앙정치와 지역정치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에서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진상규명·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한 목소리

국회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여야, 합동분향소 설치 '추진 중'

여야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은 5일,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어 희생자들을 기리고, 제도적 문제점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연구단체 '생명안전포럼' 주관으로 추모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 최초 신고자, 지역상인, 구조자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건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두 달여 우리 국회는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이제 국정조사가 마무리 됐지만 참사를 기

억하고 책임을 규명하며 다신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데는 시한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의 다짐'도 발표했다.

의원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희생자 추모에 최선 △국민 생명·안전 책임져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 자각 △이태원 참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예방,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 문제점 바탕으로 피해 회복 추진 △희생자 추모, 기억 사업 적극 추진 및 피해자 지원 차질없이 진행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이 아무리 감추고 외면하려 해도 정의는 반드시 회복되고 진실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국가는 과연 그날 무엇을 했는지, 국가는 참혹한 아픔 앞에 어떤 책임졌는지 이를 밝힐 책무는 우리 정치에 있다. 국민과 유족이 저희에게 부여한 소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내는 엄숙한 분위기 속 곳곳에 선 오열이 터져나왔다. 특정당 대표가 연설할 때는 야유가 들리기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마친 뒤에는 객석에서 "반성하라", "각성하라" 등의 구호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현행 관리자 중심이었던 재난안전법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회장은 국회, 정부, 서울시에서 공식 합동 분향소를 만들어줄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추모제가 끝난 뒤 여야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요청한 합동분향소 설치에 대해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임명... "소통 적극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사진)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이 신임 대변인은 서울신문에서 정치부장 등을 지냈고, 이후 2017년부터 문화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재직했다. 2017년 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장, 정치부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정치, 외교, 사회 등 국내외 정세와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

을 제시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정을 수행하는데, 사회를 유지하는 데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